



日 1인당 국가부채 771만 엔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, 정부단기증권을 합한 중앙정부의 부채가 9월 말 기준으로 983조 2,950억 엔(1경 3,477조 원)에 달한다고 보도함.

-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3개월 간 7조 1,098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임.
 - 일본 총무성이 추산한 10월 기준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,753만 명으로 나타나 일본인 1인당 부채 규모는 771만 엔(약 1억 600만원)에 달한다는 분석임.
 - 또한, 내년 3월에는 일본 국가부채가 1,000조 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전문가의 예상임.
- 한편, 국제통화기금(IMF)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29%로 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, 고령화로 인한 연금 등의 복지 지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적자 국채 발행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평가임.

■ 한편, 일본 정치권에서는 2015년까지 현행 5%인 소비세를 10%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, 일본 국채의 95% 이상을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주장함.

- 그러나, 일본 재무성은 소비세 인상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45조 4,000억 엔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, 국민의 저축과 투자금으로 국채를 떠받치는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함.
 - 여기에 엔고 저지와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도 추가 자금은 필요하며, 중국 및 유럽 수출도 최근 급속하게 줄어들어 일본 경제가 가파르게 침체되고 있음.
-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, 출산율 제고,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근본적인 복지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(마이니치 외, 11/12)